

먹튀 방지 & 고용 안정...한국GM 해법 '묘수' 없나

GM, 우리 정부에 5000억원 이상 공적자금 투입·세제혜택 요구 호주서 '먹튀' 전력...정치권 "끌러다닐 이유無 실사부터 진행"

제네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리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GM은 우리 정부에 50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산은 유상증자)와 세제혜택을 요구하며 이날 말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여당은 일단 지원에 앞서 실사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자리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철수를 막아냈지만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 결국 정부 돈만 받은 뒤 철수하는 '먹튀' 우려도 있어 묘수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단순한 지원만으로는 안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이번 기회에 고비용 구조를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도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GM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3만명이며, 2·3차 협력업체 등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노동자를 모두 합치면 15만7000

명에 이른다.

정부는 산업은행은 GM에 대한 의혹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GM이 호주에서 정부지원만 받고 철수한 사례가 있는 만큼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실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GM은 호주 정부로부터 2001년부터 12년간 1조7000억원의 지원을 받고도 2013년 공장을 철수했다.

정치권에서는 GM군산공장이 사실상 거의 가동되지 않는 공장이라고 군산의 GM 협력업체들이 현대·기아 등 다른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GM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GM은 2013~2016년 한국GM에서 연 9% 안팎의 차입금 이자로 4620억원을 가져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부담해온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2014~2016년의 누적 적자보다 많은 1조8580억원이 연구개발(R&D)비로 지출된 과정, 글로벌GM이 한국GM에 부품을 비싼 가격에

팔고 완성차를 싸게 사가며 적자 경영구조를 만들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GM은 고금리 대출과 납품 가격,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홍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지회장은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정부가 군산공장, 한국지엠을 회생시킬 수 있게 해 준다면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GM 자본 특성상 정부에 계속 지원 요청만 하고 나중에 철수한다는 말을 다시 할 수 있으니 정부나 산업은행이 철저하게 경영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법적인 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이어 "매출 대비 제조원가 고금리 이자 문제 등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선적으로 군산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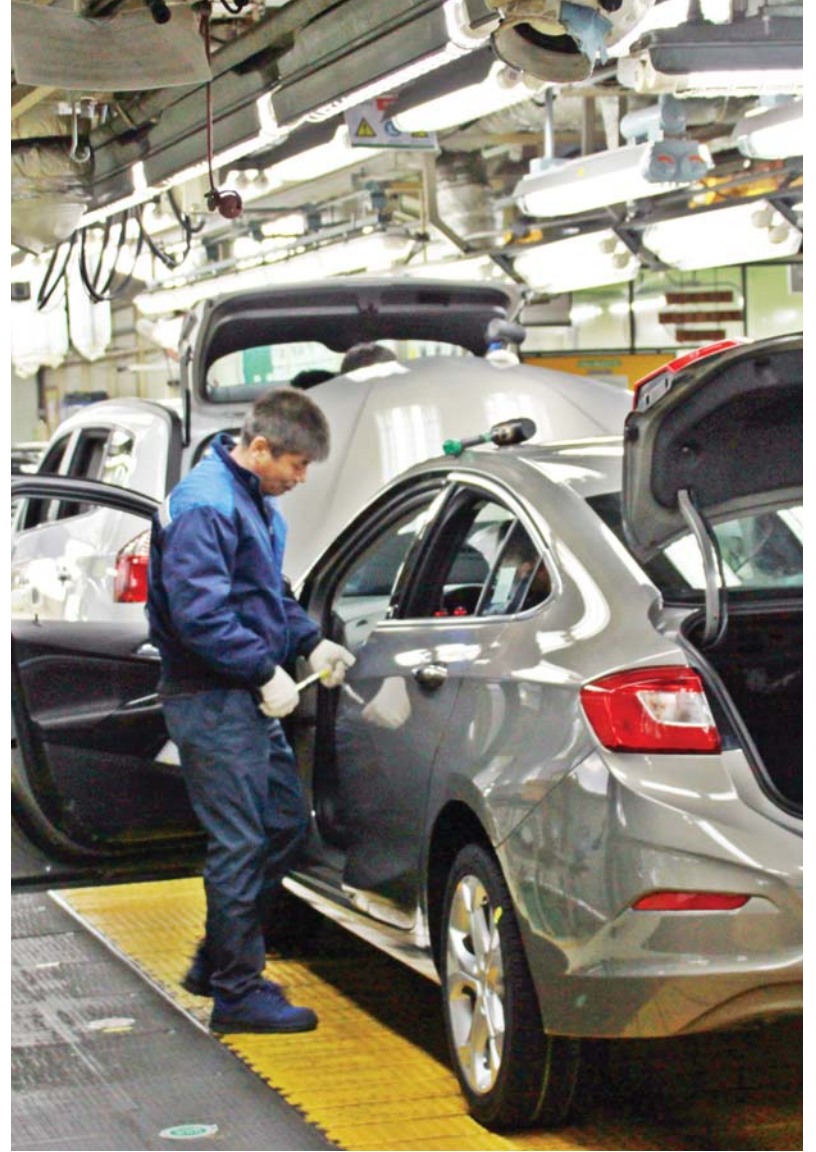
융상의 특별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신용보증, 고용·산재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GM대책 TF'를 맡고 있는 홍영표 위원장은 이날 "한국GM 부실화의 원인은 글로벌GM의 돈만 버는 전략에 한국GM이 희생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부품 가격이 30~40% 높다는 거 엄청난 기술 지문료를 미국에 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글로벌GM은) 2조7000억원에 이르는 본사 부채의 이자율을 5%까지 높여 한국GM의 부실을 가속화했다"며 "한때는 미국이 파견한 임직원이 300명에 달했는데, 전 세계 어느 다국적 기업도 현지에 이렇게 많이 파견하지는 않는다. 고비용도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GM과 논의하겠지만 GM 본사만 배 불리는 문제에 대해 한국GM이 해법을 제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노조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양보와 희생을 한다고 한다"며 "TF는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 빠른 시일 내에 한국GM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한국지엠 노조 "자구책 없는 혈세지원 동의 못해"

제네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가 20일 "자구책 없는 혈세지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글로벌 GM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글로벌 GM은 고금리이자, 이전가격 장난, 과도한 매출원가율,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로 한국지엠 재무상태를 밑빠진 독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구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국민혈세를 지원해 달라는 GM자본의 요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노력이 없다면 GM자본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운운할 자격이 없으며 우리 정부와 노조에 어떠한 협조도 요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글로벌 GM측에 ▲군산공장 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계획 철회 ▲외국인 임직원(DSP) 및 상위 이상 임원 대폭 축소 ▲차입금 전액(약 3조원) 자본금 출자전환 ▲구체적 신차부담 완화 제시 ▲내수·수



한국GM노동조합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발표와 구조조정에 대해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고용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즉각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생불량 확대 ▲미래형 자동차 국내개발·생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국지엠의 비정상적 경영실태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며 ▲GM의 자본부자와 시설 투자 확대 ▲한국지엠 특별세무조사, 경영실태실사에 대한 노조의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입한택 노조 지부장은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22일에 간부들과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계획을 놓고 투쟁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글로벌 GM은) 2월말을 시한으로 잡았지만 우리는 2월 말까지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임 지부장은 "중요한 것은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군산공장에 대한 폐쇄결정을 한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폐쇄가 철회되지 않으면 교섭도 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스

지엠(GM) "군산공장 폐쇄는 한국지엠 살리기 위한 조치다"

지엠(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지난 3년 동안 20% 수준의 낮은 가동률을 꼽았고 한국지엠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20일 뉴스스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지엠은 지난해 군산 공장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고 심사숙고한 끝에 생산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한국지엠이 국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건은 이어 "이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며 뒤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제 곳에서 두 곳으로 차량 생산기지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이번 계획은 중장기적 생산물량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했다. 현재 예측 물량으로는 모든 생산 사업장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

라고 설명했다. 2000여명에 해당하는 군산공장 직원들에게 상당 규모의 희망 퇴직금을 제공하고, 전직 지원 프로그램(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및 기타 전환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사의 지원 프로그램을 거부할 경우 강제해고도 열두에 두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지엠(GM)은 "현시점에서 언급하기엔 너무 이르다. 원활하고 순조로운 사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엠은 "글로벌 신차 배정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 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지엠이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월말까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